

도쿄도, 재일한국인 겨냥 '헤이트 스피치' 인정

일본 도쿄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인권존중조례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상대로 한 2건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모욕하는 증오표현)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도쿄시부야역광장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17일 '세계일보'가 도쿄신문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도쿄도는 전날, 지난 5월 네리마구와 6월 다이토구에서 각각 진행됐던 거리 선전전과 데모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한 언동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 네리마구의 거리선전 활동에 선 우익 성향의 참가자가 확산기를 사용해 "조선인들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죽이자." 등의 혐오성 발언을 했다. 다이토구의 데모 행진에서도 같은 구호가 나왔다.

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열린 전문가심사회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도쿄도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의 언동이 헤이트 스피

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쿄도는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사 주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쿄도는 이에 대해 "계몽을 목적으로 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내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현장이 주장하는 인권 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차별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인권 존중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1

일부터 시행했다. 일본 광역단체인 47개 도도부현 중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첫 조례였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 대책으로 3차례 이상 위반하면 50만엔(약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고국 탈출한 베네수엘라인들, 혐오·차별 시달려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탈출한 베네수엘라인들이 혐오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어난 중남미 국가에서 이들을 향한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연합뉴스'가 미주기구(OAS)의 최근 발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베네수엘라의 경제난과 정치 혼란을 피해 탈출한 이들이 460만 명을 넘어섰다. 이웃 콜롬비아에 160만 명, 페루 90만 명, 미국 42만2천 명, 칠레 40만 명, 에콰도르에 35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들어갔다.

이들 국가 중 베네수엘라인을 향한 차별과 제노포비아 사례가 가장 많이 들려오는 곳은 페루이다. 최근 페루 야당 의원 에스테르 사아베드라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베네수엘라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페루연구소(IEP)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베네수엘라인들의 이민에 반감을 나타냈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도 높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베네수엘라인 엑소더스 초기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두 팔 벌려 수용했던 페루는 이민자 행렬이 끊이지 않자 몇 달 전부터 입국 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의 조사에서 중남미 전역의 베네수엘라 이민자 중 46.9%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전 조사의 36.9%보다 비율이 늘었다. 특히 페루에 있는 베네수엘라인 중엔 65%가 차별을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페루에서 발생한 범죄 중 베네수엘라인들이 저지른 것은 1% 미만이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베네수엘라인도 1만 명 중 5명꼴에 불과하다.

페루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를 규탄하며, 자국내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 이행 추가 축소 조치 경고

이란이 2015년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약속을 추가로 축소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루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럽이 JCPOA를 통해 이란에 주기로 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이란은 적절한 시기에 4번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 5월 이래 이란은 3차례에 걸쳐 핵연료 저장량을 늘이고 저준위 우라늄을 고준위로 농축하는 한편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가동해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확대했다. 이는 모두 이란 JCPOA에서 금하는 것이지만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핵합의 이행을 선언한데 반발해 대미 압박을 위해 순차적으로 조치를 강행했다.

JCPOA는 2015년 7월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P5+1'이 타결한 합의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란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 재개 등 경제적 이익 보장을 요구했지만 유럽 3개국은 이란에 JCPOA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이탈을 선언하고 이란 제재를 부활하면서 중동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JCPOA에 서명한 유럽을 대한 이란의 '전략적 인내'가 고갈됐다고 이행 수준을 추가로 축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우리는 (유럽인들의 JCPOA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유럽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